

01

2023 지방 7급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 ③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속성이 있다.
- ④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해설

- ① (O)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가지는 속성을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직무 중심의 분류 체계로 담당 직무의 수행 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합니다.
- ③ (X)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에서의 승진이나 전보는 가능하나 다른 직렬로의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속성이 결여됩니다.
- ④ (O) 직위분류제에서는 조직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공무원은 다른 직무를 맡기 어렵습니다.

정답 ③

02

2023 지방 7급

사바스(Savas)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재(private goods)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 ② 공유재(common pool goods)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
- ③ 요금재(toll goods)는 X -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 ④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 ① (O) 시장재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 부문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서비스의 안전과 규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집단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② (O) 공유재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공급비용 부담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③ (X) 요금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요금재가 창출하는 독점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공급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정부실패로 지적되고 있어 요금재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④ (O) 집합재, 즉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야기됩니다.

정답 ③

03

2023 지방 7급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② 공익 실제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 ③ 기계적 효율성은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④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해설

- ① (O) 가외성은 예측 못한 실패를 줄이고 조직의 오류가능성 감소로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 ② (X)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봄 → 공익의 과장설
- ③ (X)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및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은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기계적 효율성은 효율을 수량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계적·물리적·금전적 측면에서만 파악한 개념입니다.
- ④ (X)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 → 수직적 형평성

정답 ①

04

2023 지방 7급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의 하나는, 예를 들어 “뛰기 전에 살피라”라는 격언과 “지체하는 자는 진다”라는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언과 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는 상호모순성이 많다.

- ① 윌슨(Wilson)은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고 했다.
- ②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③ 굿노(Goodnow)는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명으로,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으로 정의했다.
- ④ 사이먼(Simon)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했다.

해설

굴릭(Gulick) 등이 제시한 행정관리론(원리접근법)의 원리들은 상호 모순되는 격언(proverb, 속담)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학자는 사이먼이고, 사이먼이 체계화시킨 이론은 행태론입니다.

정답 ④

05

2023 지방 7급

「국가재정법」상 (가)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헌법재판소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국민권익위원회
- ㉣. 국가인권위원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해설

(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독립기관, 즉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①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06

2023 지방 7급

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이념형적 모델인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 ② 주주 자본주의 모델의 기업규율방식에는 이사회외의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등이 있다.
- ③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목표이다.
- ④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의 운영 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및 통제에 관한 거버넌스입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델은 소유권과 지배권의 집중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누가 기업지배의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특히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 따라 설계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국민 또는 지역주민, 소비자, 공공기관의 근로자 등 주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구를 공공기관 경영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익대표체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④ (X)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 경영참여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장기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 주주 자본주의 모델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의 비교

구분	주주 자본주의 모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기업의 본질	주주 주권주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	기업공동체 주의 (기업은 하나의 공동체)
경영목표	주주이익 극대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
경영상의 문제점과 원인	대리인 문제, 주주의 통제력 부족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반영 실패
기업규율 방식	이사회외의 경영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조직에 의한 통제, 주거래 은행의 경영감시 및 통제, 이해관계자 경영 참여
기업성과 측정 방법	기업의 시장가치 (주식가치)	기업의 시장가치, 고용 관계, 공급자와 구매자와의 거래관계 등
근로자 경영 참여	종업원지주제(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연금펀드를 통한 지분 참여	이사회를 통한 근로자 경영참여, 공동결정 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제적 가치 추구, 단기업적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 전체 이익 추구, 장기적 성장 추구

정답 ④

07

2023 지방 7급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
-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주민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X)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 주민소송제도는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2006년 시행).

④ (X) 비례대표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①

08

2023 지방 7급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의 욕구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회귀적이고 하향적인 욕구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 ②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은 종업원의 직무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
-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 - 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 인지를 강조했다.

해설

- ④ (X)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 - 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 인지를 강조한 것은 포터와 롤러의 성과-만족이론입니다. 직원의 노력의 결과 달성되는 근무 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특성 및 역할 인지의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역할 인지란 자신의 직무를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답 ④

09

2023 지방 7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 ② (O)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7항
- ③ (X)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정답 ③

10

2023 지방 7급

조직문화 및 변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퀴(Quinn)은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해 '내부지향 - 외부 지향'과 '유연성 - 통제(안정성)'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도출하였다.
- ㄴ. 홉스테드(Hofstede)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 ㄷ. 레빈(Lewin)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unfreezing),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moving),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동결(refreezing)하는 3단계로 제시하였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해설

- ㄱ. (O) 퀴와 로보그(Quinn & Rohrbaugh)의 경험가치모형에서는 초점이 내부(조직원의 복지와 능률성)인지, 외부(환경과 관련된 조직)인지 여부와 조직 구조와 관련되어 변화와 융통성을 강조하는지, 통제(안정)를 강조하는지에 따라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 ㄴ. (X) 홉스테드의 문화차원에서 권력거리가 약한 문화는 분권화나 권한의 위임이 잘 되어 있는 반면, 권력거리가 강한 문화는 집권화와 권위주의적 요소가 강합니다(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 X).
  - ㄷ. (O) 조직 변화의 과정적 측면에서 레빈은 조직 변화의 3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조직변화의 3단계(레빈의 모형)

해빙 (unfreez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원들이 변화를 깨닫게 하는 과정</li> <li>·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열음을 녹이듯이 개인의 태도와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단계</li> </ul>
변화 (chan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전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 순종, 동일화, 내면화가 나타남</li> <li>· 순종: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이 나 다른 집단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li> <li>· 동일화: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 만족하거나 자아상과 합치된다고 보고 수용하는 것</li> <li>· 내면화: 개인이 처한 상황이 성공적인 대처를 위해 새로운 행동을 요구할 때 일어남</li> </ul>
재동결 (refreez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게 형성된 행동이 정형화된 행동으로 굳어지는 과정</li> <li>· 새로운 형태가 안정화되어 다른 형태로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li> </ul>

정답 ②

11

2023 지방 7급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다수의 평정요소와 평정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
- 평정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대상자 평가
- 평정요소와 평정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 ② 가감점수법
- ③ 서열법
- ④ 체크리스트 평정법

해설

평정요소를 나열하고 각 평정요소(ex 기획력, 의사전달력, 협상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마다 그 우열을 나타내는 척도인 등급(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우수)을 표시하는 방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입니다. 평정 요소에 대한 등급을 정한 기준이 모호(ex 우수, 매우 우수)하여 평정요소와 평정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답 ①

12

2023 지방 7급

현대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 ② 조직근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 ③ 혼돈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기술, 규모,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요인에 대한 조직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해설

- ③ (O) 혼돈이론은 균형과 질서에만 집착하지 않고 혼돈과 무질서의 긍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폭넓고 장기적인 변동의 경로를 찾아보는 이론입니다. 혼돈이론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지만,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와 현실세계에서 적용에 필요한 만족스러운 길잡이와 수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④ (X)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보편적인) 유일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의 방법은 없다는 명제를 기초로 합니다(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 X).

정답 ④

13

2023 지방 7급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해설

- ① (O)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 ② (O) 기준타당성이란 시험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직무 수행실적)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말합니다.
- ③ (O)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 ④ (X)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답 ④

14

2023 지방 7급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대상은 아니다.

해설

- ① (O)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② (X)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O)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 ④ (O)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의무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한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부직공무원

정답 ②

15

2023 지방 7급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比)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②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기준으로 활용된다.
- ③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해설

- ① (O)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해 실제 재정력을 과소평가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② (X)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일반재원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액의 비 X).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기준지표는 재정력지수입니다.
- ③ (O)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지표입니다.

정답 ②

16

2023 지방 7급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 (O) 「국가재정법」 제31조
- ② (O) 「국가재정법」 제35조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X)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합니다(제시상예본).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O) 「국가재정법」 제59조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17

2023 지방 7급

정책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증 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 ②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 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주관적 ·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있으며 이들은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결과예측에서도 활용된다.
- ④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해설

- ② (X) 다른 정부의 경험, 즉 다른 정부의 정책목록들도 정책대안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이 달라지면 동일한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므로 다른 나라의 정책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상황의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O)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는 정책결과의 예측 외에 정책대안의 개발 및 창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18

2023 지방 7급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로위(Lowi)의 분배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 ②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 ③ 아몬드(Almond)와 파월(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적 ·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 ④ 로위(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설

- ① (X)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 → 재분배정책
- ③ (X) 민간에게 인적 ·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 추출정책
- ④ (X) 분류된 정책은 배타성이 있어만 분류의 가치가 있는데, 로위가 제시한 정책유형론에서의 재분배정책은 규제 및 분배정책과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업발전이라는 국민경제적 목적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배분적 성격의 것이 되고 보호대상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보조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재분배적 정책이 됩니다. 분류된 정책유형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개념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은 Lowi의 유형 중 어느 것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lmond & Powell의 추출정책 중 대부분은 Lowi의 정책유형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 X).

정답 ②



19

2023 지방 7급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후적 비교집단 구성(비동질적집단 사후측정설계)은 선정 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② 진실험은 모방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더 우수하다.

해설

- ① (O)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는 정책집행 이전 자료가 없어(정책 프로그램이 집행되고 난 후에 프로그램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사후에 측정) 실시 이후 비교집단을 설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무작위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측정값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실험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을 선발함으로써 발생하는 편견인 선발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O) 모방효과란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로 실험집단의 사람들이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통제집단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방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실험의 약점은 모방효과입니다.
- ③ (X)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무작위 배정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짝짓기를 통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답 ③

20

2023 지방 7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 ① (X)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 ②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 ③ (X)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 ④ (X) 국무총리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②